

보도해명자료 (‘15.10.6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‘2년전 실기’에 비판 목소리” 제하 기사
(‘15.10.6, 문화일보)

- TPP 참여 선언 여부는 그간 정부 입장으로 밝혀온 바와 같이 협정문 공개 이후 경제영향 분석 및 공청회, 국회 보고 등 통상절차법상 절차를 거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방침임

※ 관련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TPP 대책단 여한구 과장(02-3497-1783)

1. 보도내용(요지)

- 박근혜정부 출범 초부터 한·중 FTA 체결에 집중해 온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TPP 참여에 반대했으며, 지난해 11월 한·중 FTA 타결을 선언한 뒤 TPP 참여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최근 TPP 참여를 뒤늦게 선언한 것이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TPP 참여에 반대했으며, 한·중 FTA 타결 선언 뒤 TPP 참여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윤상직)는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TPP 참여에 따른 거시경제 영향분석(‘13.4~7월)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, 공청회(‘13.11월) 등을 진행하고 TPP 참여에 대해 관심 표명(‘13.11.29)을 한 바 있음
- 따라서 TPP 참여 검토는 ‘13년초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한·중 FTA는 ‘14.11월 타결되었는 바, 한·중 FTA 타결을 선언한 뒤 TPP 참여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, 최근 TPP 참여를 뒤늦게 선언한 바도 없음